

Special Report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 I.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 II. 총선 이후 정책 전망
-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목 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분야 및 정당은 가나다 順)

I.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3
II. 총선 이후 정책 전망	7
1. 경제정책	7
2. 대외정책	11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14
1. 공정거래	14
2. 교통/모빌리티/물류/운송	19
3. 국토/건설/인프라	22
4. 금융/가상자산	26
5. 기업지배구조	31
6. 노동	33
7. 문화/예술/방송/미디어	37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41
9. 에너지	47
10. 일본	51
11. 정보통신/과학기술	53
12. 조세	57
13.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61
14. 형사사법	65
15. 환경/ESG/탄소중립	68

I.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1. 총선 결과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108석, 제1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정당	지역구	비례	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161	14	175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90	18	108
조국혁신당	0	12	12
개혁신당	1	2	3
새로운미래	1	0	1
진보당	1	0 ¹	1
계	254	46	300

제22대 총선의 투표율은 67.0%로 잠정 집계돼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31.27%, 본투표에서 35.72%를 기록하여 21대 총선(66.2%)과 비교하면 사전투표율은 4.59%포인트 높지만 본투표율은 3.79%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70.2%)이 가장 높았고,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62.2%를 기록한 제주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가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는데,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5명의 무소속 당선인이 나온 바 있습니다.

¹ 다만,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 2인이 진보당 몫으로 공천되어 향후 진보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보당 총 의석수는 3석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 운영 전망

(1) 원(院) 구성 절차 및 주요 변수

- 1)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²부터 시작하여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이를 “**집회**”라 함) 하는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이를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라 함)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여야 합니다.
 - 국회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 구성 절차는 의장단 선출 및 위원정수규칙 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회별 위원 수 및 위원장 배분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 위원정수규칙 개정안 의결, 최초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 3일 이내 위원장 선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총선 후 최초 집회 및 원 구성 절차]

절 차	국회법 조항
1. 국회의원 임기 개시	- 2024. 5. 30.
2. 최초 임시국회 집회공고	-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국회법 § 5①)
3. 최초 임시국회 집회 (의장·부의장 선거)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 -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실시(§ 15②)
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정수규칙개정특위 구성의 건: 의장제외+본회의 의결 -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장 제안+본회의 의결
5. 상임위원회 위원 수 배분	-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48①)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배분
6. 상임위원장 배분	- 국회법상 규정은 없음 -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 배분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선임 요청 (§ 48①)
8. 상임위원장 선거	-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 실시 (§ 41③) -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 (§ 41②)

² 국회 개원기념일(5.31.)과 국회의원 임기개시일(5.30.):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인의 국회의원으로 동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이날을 국회 개원기념일로 하고 있으며,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현행헌법 부칙 제3조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회된 국회의 최초 집회일이 1988년 5월 30일이었으므로,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4년 주기로 5월 30일이 됩니다.

- 2)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국회법 § 37①) 결정, ②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상임위원 선임, ③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불확실³합니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 등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원 구성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⁴(국회법 § 40①)입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⁵ 역시 전반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교섭단체 역할 및 전망

- 1) 국회법상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주체(actor)로는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있으나, 이와 함께 교섭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란 ‘2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 통일을 통해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 및 그 대표의원⁶의 역할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많은 권한에도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명시해 놓고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 구성 협상에서의 역할은 물론 상임위원장직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⁷, 교섭단체 구성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제3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국회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한 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교섭단체별 의석에 따른 향후 안건처리 전망

- 1)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는 헌법 또는 국회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헌법 § 49, 국회법 § 109). 헌법 및 국회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1대 국회의 경우 원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결렬되어 최초 집회일인 2020년 6월 5일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1인), 그리고 동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4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국회법 § 40①)는 국회법 규정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2년에서 수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5 전반기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집회하여 의장단 선출(§ 15②), 임기 만료일 3일 전에 상임위원 선임(§ 48①), 임기 만료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41③)하여야 합니다.

6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통상 ‘원내대표’를 지칭)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정당의 대표와는 구분됩니다.

7 예외적으로 제16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유민주연합이 1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1개의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은 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	①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 130①) ② 국회의원의 제명(헌법 § 64③)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헌법 § 65②) ④ 국회의원 자격상실의 결정(국회법 § 142③) 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의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17④) ⑥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국회법 § 57의2⑥)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	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국회법 § 85의2①) ②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국회법 § 106의2⑥)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	①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국회법 § 15①)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헌법 § 63②) ③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헌법 § 65②) ④ 계엄의 해제요구(헌법 § 77⑤) ⑤ 헌법개정안 제안(헌법 § 128)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	①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법률안의 재의결(헌법 § 53④) ② 번안동의의 의결(국회법 § 9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가 필요한 안건	① 국회의장 · 부의장 결선 투표(국회법 § 15③) ② 임시의장 선거(국회법 § 17) ③ 상임위원장 선거(국회법 § 41②) ④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국회법 § 45④)

- 2)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하였고, 범야권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획득하여 입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 임기 초에는 교섭단체 간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갈등으로 대치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과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및 선임 등의 결과에 따라 제22대 국회의 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밑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했던 만큼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주요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총선 이후 정책 전망

1. 경제정책

(1) 공약집에 나타난 경제 부문 주요 공약 내용

- 1) 각 당에서 발표하는 총선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동안 추진할 정책을 선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중요한 단계인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정책과의 상충 여부/법령상 절차, 주무 부처 및 예산 제약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 이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각 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안정, 2) 첨단기술 등 성장 잠재력 확충, 3)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4)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5)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6)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 7)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8) R&D 및 교육 혁신, 9) 탄소중립 및 ESG 대응

현 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 안정	-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 -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 예금자 보호 강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재형저축 재도입
성장 잠재력 확충	- 중소벤처/스타트업 R&D 대폭 확대 -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	-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 투자 및 수출 활성화 - 대못 규제 개혁
저출생 극복	-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자녀출생에 따라 원리금 상환 감면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촘촘한 돌봄, 교육환경 구축 - 돌봄 격차 해소
불평등, 양극화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및 금리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 및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중소벤처의 지속 성장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확대 - 중소/중견기업 정년 후 재고용 확대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	-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 - 어르신 일상생활과 건강생활 지원
균형발전, 지역소멸	- 사회적 경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금융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 확대	-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 의료/디지털/문화 격차 해소

청년실업	- 청년층 취업단계별 지원 강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확대 - 여성/청년 채용시 성차별 관행 근절	- 청년대학생 학자금/주거비 경감 - 청년/신혼/출산가구 내집 마련 지원 - 인턴 희망고문 근절
R&D, 교육 혁신	- 정부R&D예산 전체 예산의 5% 확보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학교 설립정책	- 교육특구 및 지역주도 공교육 활성화 - 기초와 도전적 연구과제 투자 확대 - 젊은 과학자에게 연구 생활 지원금 지원
탄소중립, ESG	- 친환경/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지원	- 기후 대응 자원 확대 및 control tower 강화 - 재생/무탄소에너지 등 저탄소 전환 촉진

(2) 공약에 따른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 1) 인구 문제(저출생)나 기후변화 등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는 양당 인식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특별회계 신설 등 정책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산업별, 지역별 대책으로까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 2) 지역/지방정책은 양당 모두 공약의 구체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성장정책이 다수를 차지(지방의회법 제정,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이용, 지역 금융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견인, 지역 중소방송 지원, 지역 생활문화권 확보 등 프로젝트 중심의 공약 제시)
 -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과 격차 해소를 강조(수도권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의료격차 해소,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경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시)
- 3) 양당 모두 취약계층, 간병비, 노인 소득안정, 소상공인, 민생회복, 그리고 학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 공약이 많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고, 재정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끌어 올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임금-물가의 상호 견인 작용에 따라(price-wage spiral 현상) 오른 물가가 생계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다시 임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제부문 공약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장 큰 공약이고, 기타 세제 개혁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제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률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현실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의 세액공제 확대, ISA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한도 없는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주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¹을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5) 금융 부문의 공약은 양당² 모두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서민/중소 상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한바, 이는 규제 완화나 감독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산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 중입니다. 동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 매치 운용 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상품성 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며,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6) 부동산 부문의 공약은 양당 모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규제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은 공약으로 다루지 않은 대신에, 서민이나 전세 생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국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나, 정책에 따라서는 재정 소요가 많아,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의 단계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 억제, 조세특례 적용요건 엄격화 등 국세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 향후 일정은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 각 부처 통보, 4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2 국민의힘 공약을 보면, 예금보호 강화, 서민금융서비스의 종합화 제공, 낮은 금리 상품으로의 대출이동 편리화, 대출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 확대, 가상자산관련 법/제도 정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 등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거나 추진이 용이하나, 재형저축 재도입이나 서민/소상공인 대상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 중소기업/근로자의 퇴직연금 확대,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자금 공급, 중소/중견 기업에게 맞춤형 기업금융 공급 사업들은 재정당국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도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은 쉽지는 않지만 현행 제도난 정책의 보완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나,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축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자금 금리부담 완화, 지역금융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은 부처간 협조나 기존제도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임.

- 7) 그간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완화나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하여는 양당 모두 공약사항이 없었으며, 그 대신에 기업 현장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중소기업 확산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안전 체계 구축, 건설안전 강화/약자 보호/스마트 건설 인프라 구축 등 건설 중흥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8)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경부선 등 주요 철도를, 더불어민주당은 대상 철도 노선 및 구간을 지정하고, 철도/GTX/도시철도 등의 도심구간은 예외 없는 지하화를 약속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21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³에 착수(24. 3. 22. 국토교통부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공약노선과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하며, 사업 필요성/실현 가능성/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9)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4.5일) 도입 지원,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여 폐기물 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의 단계적 퇴출 등을 제시하였고, 국민의힘은 휴대폰 구입비 및 통신 요금 부담 경감, 전력산업 기반 기금 인하 등 기업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들 공약은 파장이 커 시행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본 연구 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026년 3월까지 24개월간 수행.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하고,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할 예정

II. 총선 이후 정책 전망

2. 대외정책

(1) 외교 안보 정책 기조

- 1)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은 행정부(대통령) 소관으로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체제 공고화, 인·태 전략 이행, 글로벌 중추 국가 구현, 2)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현상 변경 대비, 3)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외교 노력, 4)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도발 대비를 탄탄히 하는 동시에 대북 핵 억지 및 제재 이행 강화, 5) 러시아와 북한 접근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군사기술 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관련 주요내용을 토대로 한 대외정책 방향을 보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한일협력을 기조로 하여 중·러·북한 관계를 상호 이익과 존중의 기초하에 관리·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인·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서 적극적 역할을 추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주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 헌법 가치에 충실한 통일 준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결에 비중을 두는 입장이고,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 및 한반도 안보와 평화 추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국 대응 전략 변화 예상

1)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전략 변화 가능성

① 미국 대선은 올해 최대의 지정학적 이벤트

-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예상되는 올 11월 미국 대선은 최대의 지정학적 이벤트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¹⁾는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격차가 근소하여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국 3. 21. Activote 47.3%(바이든) vs. 52.7%(트럼프) --- 5.4% 트럼프 리드
3. 18. Economist 43.0%(바이든) vs. 42.0%(트럼프) --- 1.0% 바이든 리드

- 선거의 주요 변수로는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4개 사건, 91개 혐의), 2) 건강(바이든 81세, 트럼프 77세), 3) 경제 상황, 4) 낙태 및 이민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될 경우, 제1기 집권시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공화당 내부의 저항을 제거하고 트럼프 충성주의자로 채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 위주(다자주의·가치 외교를 경시하고 거래적 외교 중시)의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 강화, 기후변화 정책 후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안보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1) 한미 동맹에 대한 낮은 인식, 2) 한미 연합 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에서 규모 축소 가능성, 3) 주한미군 감축 또는 구조조정(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대만사태와 연계), 4)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 핵협의그룹) 등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한 최근 진전의 후퇴 우려, 5) 방위비 분담 증가와 한국군의 역내 역할 증대 요청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북핵 문제 관련, 1) 제1기 경험에 비추어 제2기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교섭 재개 가능성, 2) 북한과의 교섭에서 중간단계로 사실상 핵 군축으로 흐를 가능성(북한의 일부 핵무기 잔존과 제재 해제 교환으로 사실상 핵무장 국가 인정)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3) 잠재 핵 능력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가 공약대로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 FTA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1) 대미 무역흑자의 강제 축소를 도모할 우려가 있고, 2)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또는 취소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총선결과에 따른 대일 정책의 변화 가능성

① 일본 관련 양 당의 주요 공약 사항

[국민의힘]

- 한일관계 정상화 및 올바른 역사 인식 속에서의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추구

[더불어민주당]

- 한일 역사문제 적극 대응

-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
- 독도 영유권, 역사 왜곡 등 한일 역사 문제 적극 대응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강경 대응
- 국제기구에 지속적 문제 제기, 유사 입장국과의 다자주의 공조 및 일본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과의 공조 추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 위해 특별안전조치 4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추진

- 피해어업인 지원 및 어업재해 인정
- 농수산물 원산지/이력 표기 및 관리 강화, 국민건강 위해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시사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간 외교·통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대일 외교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대응 능력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 종사자의 경우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및 각 교섭단체의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2)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문제, 3)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인근 국가 분쟁 발생시 국군의 파견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1

공정거래

Contacts

• 최한순 변호사	T. 02-316-4707	E. hsochoi@shinkim.com
• 최종혁 외국변호사	T. 02-316-4232	E. jhchoi@shinkim.com
• 김의래 변호사	T. 02-316-1779	E. erkim@shinkim.com
• 이상돈 변호사	T. 02-316-4638	E. sdlee@shinkim.com
• 이창훈 변호사	T. 02-316-4645	E. chlee@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건설현장 하도급 및 불법행위 규제

- (국민의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 건설공사 업역 간 불공정 개선,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사용 의무화,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나. 시사점

건설현장 하도급 및 불법행위 규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하도급거래 관련 여러 불법행위 내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측의 경우 건설현장에 만연한 감리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현장의 안전 보장 및 건설업의 경쟁력 회복 등의 관점에서, 건설사 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개선하고 하도급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안전 문제 및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법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조사 및 제재수준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 한편 관련 민원제기 및 신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 시행 방안을 살피는 동시에,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하도급법을 비롯한 甲-乙관계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

- 개별법에 산재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간이 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 신설 및 보강

◆ 제조물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보장

- 제조물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 동일 제조물 유사·동일 사고 반복 시, 제조사에 사고 관련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AI, 소프트웨어 등을 제조물 범위에 포함

◆ 프랜차이즈 납품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

- 가맹점의 납품대금 카드결제 의무화 및 결제 맞춤형 카드 발급
- 정보공개서상 전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 결제수단 비중 등 공시의무 추가

◆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 환불 및 수수료 정책 수립

- 모바일상품권 환불(소비자), 수수료(가맹점) 체계 개선 등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
- 물품교환형 모바일상품권 전액환불 정책 확대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투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나. 시사점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하여 여당은 주로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금번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민의힘은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분

쟁조정 관련 통합법 제정,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 소상공인 간, 또는 공급사업자 등 중소기업 간 분쟁에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에 앞서 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그런 분위기에서 그 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잠재적 분쟁이 분쟁조정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으로 부각될 것이고 조정 불성립 시 공정위 등의 조사로의 전환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납품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 가맹사업표준계약서상 현금결제 강요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상 강제적인 효력을 갖지 않아 일부 가맹본부는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납품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 가능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가맹본부의 현금결제 강요 관행 또한 근시일 내에 시정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 환불 및 수수료 정책 수립: 지난 수년간 기프트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불공정한 기프트콘 환불 정책, 과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환불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환불한도를 상향하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표준약관 개정 및 정책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기업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형성되었던 관행들이 소비자 및 가맹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규제가 과도하여 펀드 조성 및 투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CVC 설립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자금 유치 한도 또는 해외투자 금액 비중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등 산재한 플랫폼 자율규제 체제 정비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대리점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 대리점주,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단체등록제 도입 및 단체협상권 부여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 중소기업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동교섭권 보장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범위 및 보험대상 확대, 기술보호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
-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피해구제기금 조성

나. 시사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율, 그리고 전통적인 甲-乙관계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있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책을 주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구축: 배달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거대 플랫폼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정부부처는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를 고심 중에 있으며, 그러한 배경 하에 야당 또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해서는 각 산업 특성, 부처 및 관련 업계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물론이고 그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온 플랫폼에서의 甲-乙관계 문제까지 포함한 입법과 각 정부부처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조속히 수립 · 시행되고 이에 따른 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주,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甲-乙관계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대리점주,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등록하고 단체협상 ·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약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어느 정도 범위의 협상 · 교섭권이 보장될 것인지 알기 어렵고, 한편 이와 같은 제도는 실제 소상공인이 거래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공약 이행 및 구체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甲-乙관계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피해구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의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고려하는가 하면, 공약 이행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소기업 보호책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계약 초기부터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통/모빌리티/물류/운송

Contacts

- 이지연(Kelly J. Lee) 외국변호사 T. 02-316-1674 E. klee@shinkim.com
- 이해정 변호사 T. 02-316-1719 E. hjelee@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추진

◆ 전기차 등 무공해차 공급 확대

- (국민의힘)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 (더불어민주당) 결혼·출산 연동 반값전기차 공급, 충전인프라 확대 및 안전 강화

◆ 스마트물류체계 혁신

- (국민의힘) 소규모 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통한 AI·빅데이터 기반 초단시간 배송 구현
- (더불어민주당)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구축,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구현

나. 시사점

철도지하화 관련 민간자본유치 확대 전망: ‘철도지하화’ 사업의 자원 조달방식, 규제완화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2025. 1. 31.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점, 철도지하화 정책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공통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건대 철도지하화사업과 그 인근지역 개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되므로 기업들은 그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상 다양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규제로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지자체의 비용 보조·용자 등)를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공해차 전환기 적극 대비 필요: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은 정부의 국정과제 사항이기도 하고,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무공해차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에 대한 정책기조를 예의주시하고, 무공해차 전환 정책

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류산업 첨단화 지원 강화 예상: 정부의 국정과제에 물류산업 첨단화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모두 정부가 2023. 2. 20. 발표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스마트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 적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사업기회에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2023. 8. 민관협력플랫폼인 ‘스마트 물류협의체’가 발족되었으므로, 위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 협의체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전국 GTX 건설, 광역 교통망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두절 차단 등 교통여건 개선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 저출생 ·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격차 및 교통격차 해소
- 지방권 산업배치 · 교통망 정비 전략 마련
-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해소, 직주근접 활성화 추진 등

나. 시사점

기업 투자기회 적극 모색 필요: GTX-A 등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전국 도입, 수도권 고속(화)도로 건설,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확충 등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업의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9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정될 경우 그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 · 지역별 종합계획 등이 변동될 것이므로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교통인프라 구축 활성화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될 것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교통관련업종 종사자 권익보호 및 안전 확보

- 전세버스운송사업 표준운임제 도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대리운전자법」 제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이륜차종사자/대리운전자 등 권익 향상

◆ 미래모빌리티산업 등 교통산업 육성

- 무선급전트램, 자율협력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드론 등 신교통 육성
-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

◆ 교통공공성 강화

- 다양한 교통패스 도입(어르신 패스 · 청년패스 · 국민패스 등)
-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
- 100원택시 · 100원버스 운영 지원

나. 시사점

여객운수사업 규제 강화 예상: 현재 화물운송 분야에만 적용되는 표준운임제를 여객운송(전세버스)에 도입할 경우 운임상승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대리운전자법」 제정안 등의 입법취지가 관련업종 종사자 권익향상 · 안전강화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로서는 총선 이후 해당 분야 입법 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규제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모빌리티산업 여건 개선: 미래모빌리티산업 · 항공산업을 포함한 교통산업 육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주요 공약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사항이라는 점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 12. 26. 자율주행 ·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등 업무를 총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였고, 미래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 10.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 및 종사자로서는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도약의 기회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3

국토/건설/인프라

Contacts

- 김용호 변호사
- 조영우 변호사

T. 02-316-4202 E. yhokim@shinkim.com
T. 02-316-1644 E. ywcho@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국민의힘) 서민 ·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시니어 체육시설 확대,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 해소 등
- (더불어민주당) 구도심 폐교 활용,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아동 · 청소년 · 노인 복지시설 기능 전환 등

◆ 공공주거정책 제시

- (국민의힘) 서민 ·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확대, 노인복지주택 건설 확대
-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통한 무주택자 기본주택 공급 확대, 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확대 등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불균형 해소

- (국민의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 제1기 신도시 재개발 · 재건축, 제2 · 3기 신도시 건설 및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 성장거점 육성, 지방특화형 주거플랫폼 조성, 지방생활문화권 확보 등

◆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 시스템 확충

- (국민의힘) 재난현장조치 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및 소방산업의 국가기간산업 · 국가전략산업 지정 추진,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추진 등
- (더불어민주당) 화재안전장비 확대, 최신소방장비 도입,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 설치 지원 등

나. 시사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 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노인의 주거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시니어 체육시설 확대 등 주로 노인층에 집중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라 복지시설을 구조조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공공주거정책 확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공주거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노인층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국민 기본주거 보장 등과 같이 전국민의 주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및 인프라 불균형 해소 추진: 국민의힘은 “격차해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시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모두 지방균형발전 및 인프라 불균형 해소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기적 국토정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를 강조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지방 간 상향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및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지방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형사·행정처분 강화
- 건설노조 부당이익·불법행위 제재 및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건설·인프라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국가투자지주회사 신설 및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혁, 산업단지 허브화 추진 등

◆ 산업단지 규제개혁

-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개선

◆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구도심 정비

-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대상 확대, 철도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개발, 미래형 압축도시 재정비 등

나. 시사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건설카르텔 혁파 기초의 연장에서 불법하도급·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노조의 부당이득·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건설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종사자는 제22대 국회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인프라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제시: 국민의힘은 국가투자지주회사(한국형 테마섹) 신설 및 육성, 각종 규제개혁 방안 제시를 통해 건설/인프라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로써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산업단지 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개발의 관점 전환: 국민의힘이 금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정비계획안은 지금까지의 보존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과 그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의 슬럼화·공동화에 대응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대, 철도지하화 사업과 연계된 특화개발, 노후화된 구도심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미래형 압축도시 재정비 등이 이와 같은 관점을 잘 드러내는 공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건설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BIM, OSC 등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 및 적정임금제 도입,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 건설공사 업역규제 및 직접시공 규제 개선·폐지,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화
-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실시

-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
-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대폭 확대

◆ 4대강 녹조예방사업 추진

- 4대강 보 전면 개방
- 취 · 양수장 위치 개선
- 비점(Non-Point) 오염관리 강화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 녹조제어를 위한 수처리제 적용방안 연구검토

나. 시사점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프라 보강, 건설업자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D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전 건설분야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설계 · 시공 ·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모델을 작성하는 기술),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모듈 구성요소를 건설현장이 아닌 외부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는 건설방법) 등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강화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며,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안을 제시하는 외에도 건설업자의 경영환경과 권익에도 영향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대비 및 환경 개선 차원의 하천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분야에 있어 하천관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4대강 환경개선을 위한 보 전면개방 · 오염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특징적입니다.

4

금융/가상자산

Contacts

- | | |
|------------------|---------------------------------------|
| • (금융) 심준만 변호사 | T. 02-316-4848 E. jmshim@shinkim.com |
| • (금융) 진시원 전문위원 | T. 02-316-1741 E. swjin@shinkim.com |
| • (가상자산) 황현일 변호사 | T. 02-316-4453 E. hihwang@shinkim.com |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 (국민의힘)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
- (더불어민주당) 불법대부업 신고 포상금 2배 상향,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에 대한 이자 전부 무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 (국민의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국내투자형 ISA 신설
- (더불어민주당)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

◆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대출 지원, 폐업지원금/새출발기금 지급

- (국민의힘)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개선,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단계적 확대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은행 도입

◆ 국민연금 내실화

◆ 가상자산 제도 정비

-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 발행의 단계적·조건부 허용
 - (국민의힘)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단계적 코인 발행 허용
 - (더불어민주당)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조건부 허용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개편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개편
 - (국민의힘)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시까지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 (더불어민주당) 2025. 1. 1.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실시하되 매매차익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손익통산·손익이월공제제도 도입(5년)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pening, STO) 법제화 신속 추진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 주식거래에 준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도입
 - (국민의힘)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거래소 오더북 통합
-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
 - (국민의힘) 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금지

나. 시사점

◆ 민생금융 정책 관련

ISA 비과세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출시 이후 더딘 성장을 보였으나, 2021. 2. 투자중개형 ISA를 도입하면서 가입자수·가입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ISA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대출 지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 국민의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개선 및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단계적 확대를 제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은행 도입을 주된 공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제도 관련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추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입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심을 둔 1단계 입법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입법사항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제도 정비 등 산업을 육성하면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발행의 제한적 단계적 허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장참여자에 게만 단계적 · 조건부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통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하나, 가상자산의 발행을 제한적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양당 간에 입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개별 거래소 오더북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상자산거래소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시장감시시스템이 통합하고, 나아가 오더북까지 통합되는 경우라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5년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소득세법」이 2022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2025. 1. 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분부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5. 1. 1.부터 우선 과세하되 매매차익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 · 손실이월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 1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신속 추진: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다수의 핀테크 · 증권사 등은 STO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이를 염원하고 있으며, 자산의 토큰화 현상은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제22대 국회는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1) 가상자산 전담위원회(국민의힘)/통합감시시스템(더불어민주당)와 같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 (2)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 (3)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에게 가상자산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거나(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기중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더불어민주당)하여 가상자산 관련 특혜 논란을 차단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조정: 5천만원 ⇒ 1억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 이자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나. 시사점

저축·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고(5천만 원 ⇒ 1억원),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근로자 재산형성 목적의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들은 모두 개인투자자 또는 개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소득 확대를 지원하여 저축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고난도금융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 ◆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 ◆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 ◆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 강화
- ◆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 ◆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 ◆ 지역금융·사회적금융 활성화, 기유금융 활성화 등 은행 공공성 강화
- ◆ 가상자산 연계상품(ETF) 제도권 편입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나. 시사점

고난도금융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별로 고위험·고난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도 은행별로 ELT 판매 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위 공약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개인별 판매한도까지 추가 도입되어 개인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금융기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정책으로,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책무구조도와 함께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만약, 위 제도가 도입될 경우 (1) 보수환수제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2) 환수 요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페어펀드’는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같이 한국에도 위 제도가 도입된다면 (1) 페어펀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 (2)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 (3) 불공정거래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방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5

기업지배구조

Contacts

- | | |
|-----------|--------------------------------------|
| • 김병태 변호사 | T. 02-316-4038 E. btkim@shinkim.com |
| • 안혜성 변호사 | T. 02-316-4700 E. hseahn@shinkim.com |
| • 성건우 변호사 | T. 02-316-1663 E. gwsung@shinkim.com |

1.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 시정
-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
- 자사주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의무화
- 사모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법적 지분 확대 근절
- 상장회사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 사업보고서 또는 IR자료 등에 주주환원을 공시 유도
- 주요주주 관련 규제 강화: 단기매매차익 환수,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 금융기관 경영진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 강화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공공기관 ESG 평가에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등 중요 정책 사안 도입 및 평가 시 최소기준(과락제)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시 민간위원 2/3로 하여 정부 일방 통행식 운영 개선

나.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4. 2. 26. 발표한 기업가치 향상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외에도 윤리경영 측면에서 임원의 임면기준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상장사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공개매수 대상 물량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비판적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공약들은 향후 실제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딪침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인바,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법인세법 등의 개정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의 경과 및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를 비롯하여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의 일정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 사항의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수환수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2022년 미국 정부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제시된 것 외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입법의 경과 및 추이를 유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1) 내부지배구조(이사회 및 기관장의 선임, 권한 평가), (2) 외부지배구조(경영평가, 경영 보고 및 공시)의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강도높은 개선을 포함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입법의 경과 및 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노동

Contacts

- 김동욱 변호사

T. 02-316-1646 E. dwokim@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

- (국민의힘) 계속고용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중소영세기업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 연장

◆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강화

- (국민의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유연업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등
- (더불어민주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보편적 보장,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처우 금지 실질화,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사실혼까지 확대 등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 (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지도 강화
- (더불어민주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

- (국민의힘)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 지원 등
- (더불어민주당)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보건기준 마련,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나. 시사점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은 (1) 현행법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과, (2) 현행법상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계속고용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겠다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연령의 괴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 등으로 인해 정년연장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년 연장방식의 선택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정년연장 방식을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강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 기간, 대상자녀 연령 확대,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도입, (3)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4) 자녀돌봄휴가 신설, (5)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소멸의 경고등까지 켜진 것을 고려한다면,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은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급여제도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재정확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국민의힘은 특정 제도(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공휴일 제도 등)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5인 미만의 기업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공통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공휴일 제도의 경우 확대적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 국민의힘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산재예방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개편이 되어 왔으므로, 총선 이후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변경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신속하게 안착시켜 불필요한 형사처벌 등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

-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작성 행정지도

◆ 허위 채용광고 규제

-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위 채용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

나. 시사점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였다가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고, 인턴기간 동안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우려는 취지의 공약입니다. 기업들은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정확한 근무기간을 명기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인턴을 사용하거나 인턴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고, 채용형 인턴의 경우 이후에 정식 지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채용광고 규제: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공약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편

- 사용자가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선,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포괄임금제 금지 등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보호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 차별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제도화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보호 강화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표회의’ 제도 도입 등

나. 시사점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1) 근로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하고 포괄임금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공짜노동을 근절, (2) 근로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휴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1)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기업은 개편되는 제도에 부합하도록 기업 내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관련 공약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의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제도화,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시 후속 협력업체로의 고용승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제도 도입,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도 도입,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위 「일하는 사람들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기업은 보호조치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보호 강화: 관련하여 (1)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2) 단체협약 효력 확장, (3) 소위 「노란봉투법」 재추진(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등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노사관계 등 기업환경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문화/예술/방송/미디어

Contacts

- | | |
|--------------------|--------------------------------------|
| • (IP) 김우균 변호사 | T. 02-316-4083 E. wgkim@shinkim.com |
| • (ICT) 강신욱 변호사 |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
| • (ICT)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 T. 02-316-4480 E. jkwlee@shinkim.com |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콘텐츠산업 진흥

- (국민의힘) K-콘텐츠 · 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및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글로벌 진출 확대, 슈퍼 IP 확보 지원,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 (더불어민주당) 중콘텐츠 R&D 세액지원 확대, 콘텐츠 제작비 및 음악 · 공연제작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화 추진, 한국판 실리콘밸리(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

◆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및 민간 협력 강화

◆ 전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전국적 스포츠 ·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 예술인 발굴 · 지원
- E-Sports 활성화

나. 시사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세액공제로 대표되는 세제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추진 중이므로, 제22대 총선 이후 세액공제 등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K-콘텐츠”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정작 대한민국 콘텐츠업계는 해외서버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근절

대책은 외국 소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 사법권을 갖는 외국정부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해외 소재 ISP가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콘텐츠 권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해외 ISP에 미치지 않아 권리자는 침해자를 특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공약으로 들고 있으므로 제22대 국회가 긴밀한 공조를 위한 입법적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불법 콘텐츠 유통에 관여하는 중개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규제 또한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된 것)은 국내에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를 가리키며, 이하 “CDN”]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ISP, CDN, VPN 사업자 등에게 방조책임을 묻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ISP, CDN, VPN 사업자 등 중개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 역시 총선 이후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규제 상황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가짜뉴스 근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고창구 기능 활성화: “패스트트랙” 강화
-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포털·해외 플랫폼 사용자 등 참여) 운영
-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워터마크 표시제 도입 등

◆ 불법·유해정보 대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차단기능 강화
- 플랫폼 사업자의 상시 모니터링·자율점검 기능 강화
- 디지털 폭력 피해 구제센터 설치: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차단방안 안내, 피해 배상을 위한 법률자문·분쟁조정 수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나. 시사점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가능성: 언론·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규제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규제 공약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그 법적인 정의가 어려운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짜뉴스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EU·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AI의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AI 딥페이크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방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삭제·차단의무가 도입되는지 그 정책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가능성: 국민의힘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유해정보로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심의·차단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플랫폼사업자의 규율 또한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사업자는 이미 정보통신법상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등 의무를 이행중임에도, 국민의힘 공약은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생성형 AI에게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공개·보상체계 마련

◆ 시청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

- 시청자주권 현실화: 시청자위원회 이상 강화 및 설치 의무화,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강화
- 시청자 참여·평가 프로그램 편성 확대
- 공영방송 수신료의 공정·투명 운용 체계화: (가칭) 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및 자율성 보장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기준 강화

- 보도 · 제작 · 편성권과 경영의 분리 · 독립, 위반시 처벌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편: 구성 제도 개편,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엄중 처벌
- 시청자 · 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나. 시사점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논의 시작: 생성형 AI 산업이 태동 ·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저작물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 전송 등 이용행위가 일어나고,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공개 ·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일응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둔 정책이나, 그 보상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창작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정책이 생성형 AI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예술창작계와 생성형 AI 관련 산업계 모두 해당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아젠다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언론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영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임원의 선임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심의요소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므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ntacts

- 김성태 변호사
- 김현욱 변호사

T. 02-316-4326 E. stkim@shinkim.com
T. 02-316-4032 E. hwokim@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 **(국민의힘)** 제약 · 바이오 산업 육성
 -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보상체계 개선 등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 첨단 · AI 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바이오 집중 투자
 - 의약품 수출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해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 글로벌 바이오 협력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 국산원료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더불어민주당)** 제약 · 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 국산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국민의힘)**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를 통한 원가보전 지원
 - 소아 및 노인용 필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및 별도 약가 가산
 -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 **(더불어민주당)** 필수약품 공급 안정 및 보건의료안보체계 확립
 - 필수 ·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및 비축 확대

-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의 국산화 · 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 공공제약사 ·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통한 수급불안정 해소
- 신 · 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
- 국가필수백신개발촉진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 비대면진료 도입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선진화

- **(국민의힘)**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 선진화
 - 비대면진료 제도화
 - 정밀의료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개인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 지역거점 첨단 스마트병원 육성
-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
 - 비대면진료 제도화
 - 종이처방전의 공적 전자처방전으로의 전환
 - 민간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 필수의료 · 지역의료 강화

- **(국민의힘)**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응급의료 체계 강화
 -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 지역 공공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 이동식 스마트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
 - 구급대원 · 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 추진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 · 수송 방안 전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 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 **(더불어민주당)** 공공 · 필수 · 지역 의료 강화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별 도입 확대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의힘)**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6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보청기 지원 확대
- 암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첨단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폐기능검사 도입

◆ 중증·희귀질환 국가 지원 확대

- **(국민의힘)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혁신형 치료환경 조성**
 - 화농성 한섬염 등 치료제 있는 중증피부질환 급여 확대
 -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 지원
 -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검토
 - 중증·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검토
- **(더불어민주당)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국가 지원 강화**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 희귀난치질환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재정확충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등재제도 개선, 정부 직접공급 확대
 -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목허가 확대

◆ 만성질환, 비만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 강화

- **(국민의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비만치료제 급여화
 - 연속혈당측정검사, 가정형고혈압관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
 - ICT 기반 만성질환자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 확대
- **(더불어민주당) 비만예방관리체계 구축**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비만검진 도입
 - 「비만예방관리법」 제정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 책임 강화
 -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간병·노인 돌봄 지원 확대

- **(국민의힘) 간병비, 치매 부담 완화**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 간병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촉진
- 치매관리 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
- 치매어르신 위치감지기 보급
- **(더불어민주당)** 간병비 부담 완화 및 노인질환 관리체계 강화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 재택 의료서비스 및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 방문진료와 비대면 모니터링을 연계한 노인주치의제도 활성화

◆ 국민 정신건강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전국민의 마음건강 지원 및 마약·도박·알코올 등 중독문제 예방·회복 강화
 -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 정신응급 현장대응 강화 및 치료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대
 -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 생애주기별 중독선별과 조기개입체계 구축
 - 정신건강중독상담 전문인력 양성
 - 중독치료전문병원 지정 및 중독재활과 의무 연계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생애주기별 고독정책,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관리 강화
 - 외로움 정책 담당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전담조직 설치
 -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외로움경험 집단별 대응정책 개발
 - 초중등 전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후 전문기관 연계 검진 및 치료

나. 시사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선진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등 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다수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가 보상을 중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필수약품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의 안보적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필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는 약가 인상 등 적극적인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도입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선진화: 비대면진료에 관련하여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빠르게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초가 되는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견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인 증원, 특히 지역의료인 확보에 대하여는 공통된 이해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를 지역 의료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 첨단 로봇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공약에서 그 추진이 약속되었다는 점에서 제22대 국회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별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질환, 비만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컨센서스가 확고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만을 국가적 관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치료제 등으로 인한 제약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 노인 돌봄 지원 확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가정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급여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실버타운산업, 노인요양보호산업 등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기업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기회 모색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보호 강화: 국민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고독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민의힘은 중독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인프라 개선,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국가 예방접종 확대

- 어린이 HPV 백신 남아 확대, 9가 전환 추진
-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국가예방접종 도입 추진
- 50세 이상 장년층 및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 어르신 맞춤형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 생애주기별 여성 3대질환 지원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및 검진 확대,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지원 강화

◆ 미혼여성 난자 동결시술비용 지원

나. 시사점

전향적인 의료지원범위 확대 정책 도모: 국민의힘은 상당히 전향적인 국가예방접종 확대, 여성의료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이는 백신 기업, 의료기관 등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약계 및 관련 산업 분야 기업과 종사자의 경우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제정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나. 시사점

GMO 완전표시제 및 LMO법 관련 정책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시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제정 및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추진 공약이 실제로 정책화될 경우 식품·의약품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의 경우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시험이 필수적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9 에너지

Contacts

- 정수용 변호사 T. 02-316-4345 E. syjung@shinkim.com
- 류재욱 변호사 T. 02-316-1635 E. jwryu@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 (국민의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에너지 믹스 확립,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적극 지원, 해상풍력발전 법제도, 「탈석탄발전법」 제정
-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계통 연계 확보
 - (국민의힘)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성 강화: 송배전설비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규전력망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

나.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제22대 총선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원이 확대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확보 정책들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탄소감축산업으로서 수소산업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며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세제 개편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규제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조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나. 시사점

비용 ·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의 균형적 활용 강조: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을 강조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한 전기요금 상승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OP28 등 국제사회와의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 등을 고려하면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의 제정 역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비율 모니터링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징수되는 준조세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분으로 인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징수 효과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책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공약이 현실화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인하될 경우 전력산업의 R&D 축소,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에너지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전기요금 상승분을 고려해 과도한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기업의 RE100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3540(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까지 확대) 추진
- ◆ 기후에너지부 신설
- ◆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 ◆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에너지 세제(CBAM) 도입
- ◆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강화, 해상풍력 벨트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 영농형 태양광 육성

나. 시사점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 및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정책을 포함하여 COP28에서 공언한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3배)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요구하는 RE100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 및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일몰·폐지·축소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조정,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을 예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상풍력 벨트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송배전 설비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등 계통 연계 안정성 강화를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력 계통 포화 상태를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규제 강화 기조: 더불어민주당은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해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에너지 세제(탄소세) 도입 등 기업이나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신규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비하고, 2035 국가 NDC 상향, 204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업자 비용 부담 및 사업 경쟁력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에 기반한 제도 도입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화석연료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전력수급의 안정적 기반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하여 현 정부 기존 조직과의 권한 조정 문제, 현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의 지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0 일본

Contacts

• 김영근 변호사

T. 02-316-1608 E. ygkim@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국민의힘) 한일관계 정상화 및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서의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추구

◆ (더불어민주당)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및 역사·오염수 분야 강경외교 추진

- 한일 역사문제 적극 대응
 -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
 - 독도영유권, 역사왜곡 등 한일 역사 문제 적극 대응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강경 대응
 - 국제기구에 지속적 문제제기, 유사입장국과의 다자주의 공조 및 일본 지자체와 시민사회등과의 공조 추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 위해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 피해어업인 지원 및 어업재해 인정
 - 농수산물 원산지/이력 표기 및 관리 강화, 국민건강 위해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나. 시사점

한일 통상관계 변화 여부 주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22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간 외교·통상관계는 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일 외교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과의 외교·통상관계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대응 능력이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 종사자의 경우 한일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Contacts

- | | |
|--------------|--------------------------------------|
| • 강신욱 변호사 |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
| •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 T. 02-316-4480 E. jkwlee@shinkim.com |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AI 산업 진흥정책 추진

- (국민의힘) AI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양성, 학습용 데이터 확충,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확산
- (더불어민주당)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스타트업 육성,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기술 인재 양성, 생성형 AI 관련 법제 마련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 (국민의힘) 시설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정책자금 확대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연구개발(R&D) 지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 R&D 증액,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기초연구 확대
-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확보,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구축,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및 펀드조성

◆ 스마트 농·축산·식품산업 진흥

◆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디지털 격차 해소

나. 시사점

AI 산업 진흥정책 추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AI를 채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AI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AI 활용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적시에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정부 정책의 수립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AI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AI의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 윤리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AI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AI 기업들은 국내 · 외 AI 관련 입법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전적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을 시작으로 일본과 EU 등도 자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신규 시설투자에 대하여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수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하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 입법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지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연계한 R&D 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R&D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 예산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율 R&D 예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은 역대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해 온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하고

요금 인하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 연령에 걸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왔으나,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이 추진될 동력이 존재함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요금제 개편 등 추가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이용성이 떨어지는 국민에 대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농어촌 등 지방뿐만 아니라 고령층·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취약계층 전용 제품 출시 지원, 학교 및 지방 디지털 접근권 확대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범국민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우주산업 육성

- 우주항공청 출범
- 지역의 삼각 클러스터 체제 구축
- 우주경제 로드맵 추진

나. 시사점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의 형태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확대·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의 신설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주산업 육성: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우주분야 공약으로 (1) 우주항공청 출범, (2) 경남 위성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등 삼각 클러스터 체제 구축, (3) 장기적으로

달 착륙 및 화성 탐사로 이어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NASA를 모토로 설립된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추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우주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은 입법 동향 및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및 사이버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산업진흥과 개인보호의 이해상충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역할 강화
- 개인정보 유출·침해 대응 일원화로 실질적인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 하의 사이버 공격 방지 신기술 개발 및 확보, 융합 인프라 보안 강화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신규 보안영역에 대한 인재 양성 강화, 실제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 능력 함양 위한 교육과정 확대, 실전 교육 및 훈련 강화
-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先도입 後점검, 인증절차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보안제품의 적정 대가 지급, 스타트업 육성 및 보안기업 M&A 활성화

나. 시사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및 사이버보안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제도 개선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소송 등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객의 신뢰 상실 및 기업 이미지 훼손과 같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제 정비를 통해 조직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조세

Contacts

• 백제흠 대표변호사

T. 02-316-4052 E. hebaik@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생활형 세제 개선

- (국민의힘) 인적공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제, 아이돌봄서비스 공제항목 추가 등
- (더불어민주당) 인적공제확대,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등

◆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 (국민의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 (더불어민주당) 공제한도 상향조정 및 손익통산 · 손실이월공제 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나. 시사점

생활형 세제 개선: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소득세 연말정산 기본공제 확대 등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액 역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국민의힘은 2025. 1. 1.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가상자산의 법제화 시점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정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타 금융투자상품손익과 통산하고,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향후 실제 개편 방향 및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계자산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야 모두 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시 8년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ISA 가입자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ISA 상품 판매를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도입
- ◆ 어업회사법인, 어업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 ◆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상속세 면제 방안

나. 시사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공약처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불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사들은 국회에서의 논의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도입: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여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저축상품으로, 지난 2013년 부활했다가 2015년 판매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비과세 혜택만 있었을 뿐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아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에 그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어업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그동안 취득세 등 다른 과세혜택을 받는 외에 법인세 면제의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어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업회사법인 등으로서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측에 먼저 의견 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상속세 면제 방안: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기회발전특구에 제공될 각종 특혜 중 하나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큰 혜택이므로, 상속 및 증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콘텐츠 산업 세제 개선

- 콘텐츠 산업 관련 R&D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 벤처투자 세제 개선

-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및 세액공제를 확대

◆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나. 시사점

콘텐츠 산업 세제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분야에 기존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뿐만 아니라 음악, 출판,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를 포함시키고, 원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R&D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5. 12. 31. 일몰이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제도화 및 기존에 없었던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 의견 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투자 세제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제3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1)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와 (2)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산정기준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가 기술혁신형 M&A에 있어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 것에 이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A를 염두에 두고 있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가능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혁신형 M&A를 고려하는 투자자 역시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정부는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Contacts

- 백대용 변호사
- 김성범 변호사
- 안현정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중소기업 지원정책

- (국민의힘) 기회발전특구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제도,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지원 및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경비 포함 추진 등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전기요금 지원,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추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일몰 연장 추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 등

◆ 스타트업 지원정책

- (국민의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중심대학 확대 지정, 창업패키지 제도 보완
- (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스타트업 규제 개선, 스타트업 지방 비중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모태펀드 예산 확대

◆ 산업단지 개선

- (국민의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첨단기술 신산업 규제 개선, 연구개발업체 규제 개선,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 (더불어민주당) 노후거점 산업단지 고도화, 스마트 그린산단 확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나. 시사점

중소기업 지원정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타격을 줄이고자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 및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 기업운영(인력, 수출 등) 등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입법추이 및 경과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정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스타트업 펀드 및 클러스터 조성 등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스타트업의 지방 비중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및 지방 소멸 대응 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선: 산업간 융복합 및 신산업 등장 등 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기업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노후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책을 통하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있기에 산업단지 규제혁신 및 관련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구축
-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운영,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상품 개발
- 중견기업 첨단기술·전략사업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P-CBO) 지원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투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나. 시사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2024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담과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의힘은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VC 생태계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회는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CVC 설립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자금 유치 한도 또는 해외투자 금액 비중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지역 산업 육성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대표 중견기업 발굴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보호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범위 및 보험대상 확대, 기술보호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
-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피해구제기금 조성

◆ IT·SW 산업 육성

- 국내·외 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위한 SW산업 성장 지원

나. 시사점

지역 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선호와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며, 지역의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후 공약 이행 및 경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피해구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IT · SW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등에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 외 SW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W 기업 등은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 의견 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 형사사법

Contacts

- 이건주 변호사
- 박혜영 변호사

T. 02-316-4211 E. kjlee@shinkim.com
T. 02-316-4394 E. hyoungpark@shinkim.com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민생침해범죄 및 흉악범죄 대응 강화

- (국민의힘) 가석방없는 무기형 신설, 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수익환수기본법」 제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취업제한 강화 등
- (더불어민주당) 데이트폭력 법제화, 스톱킹범죄 피해자-가해자 간 분리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 등

◆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안심주소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벌금 사용 확대, 재산범죄피해 실질적 회복을 위한 몰수·추징·환부제도 개선

◆ 치안활동 강화

나. 시사점

민생침해·흉악범죄 강력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세사기·젠더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령의 제·개정이나 치안활동 강화와 같은 공약 이행과정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검찰·경찰, 지자체 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전문인력 확충 및 시·도 경찰청 사이버 전담수사팀 강화
- ◆ 위장수사범위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서 성인여성 대상까지 확대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마약·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신속 심의·차단 기능 강화
- ◆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강화 및 디지털 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

나. 시사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국민의힘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불법정보 유통, 도박 등 전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행위 양상이 다양한 만큼 수사 활동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 등 여러 기관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협력체계에 대해 관련 기업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
 - 의뢰인-변호사 간 의사교환 및 비밀보장의 권리를 명문화
- ◆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 ◆ 형사재판 간이공판절차 적용범위 및 국선변호인 조력권 확대
- ◆ 양육비 불이행 제재 강화
 - 양육비 불이행 등 집행회피목적 주소 허위신고행위 제재 도입
 - 지급이행명령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
- ◆ 벌금 몰수·추징제도 공정성 강화
 -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강화
 -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처분절차 마련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수사절차법 제정,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나. 시사점

양육비 불이행 제재 및 가정폭력범죄·교통범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불이행 과정의 주소 허위신고와 위장전입에 대해 사실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의 방법과 범위가 확장되고, 가정폭력 범죄 및 교통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경찰개혁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 방지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권 보장 확대를 제언하고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존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이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행정제재 절차에서의 변호인/변호사 권리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하며,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강화하는 등 변호인/변호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s

- | | | |
|-------------------------|----------------|------------------------|
| • (환경) 황성익 변호사 | T. 02-316-4417 | E. sihwang@shinkim.com |
| • (환경) 고민정 변호사 | T. 02-316-1655 | E. mjgo@shinkim.com |
| • (ESG) 송수영 변호사 | T. 02-316-1636 | E. sysong@shinkim.com |
| • (ESG) 장윤제 전문위원 | T. 02-316-2895 | E. yjjang@shinkim.com |

1. 공통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무공해차 지원

◆ 안전한 산업안전보건환경 마련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자원 마련, 및 조직 강화

- (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4조원 2027년 5조원) 로드맵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더불어민주당)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추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신속 설치 및 예산 확대

◆ 친환경에너지 지원

- (국민의힘)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해상풍력특별법」·「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이행 적극 지원

◆ 통합 기후재난 시스템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나. 시사점

제22대 총선 공약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탄소중립’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의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전통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에 더하여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도 병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탈플라스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탈플라스틱 대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공약에 해당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원부자재 · 공정 설계의 변화,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강화 등에 따른 영향에 심도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성안중인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협약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최종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국제협약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녹색금융 활성화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ESG와 연계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정책금융 · 녹색조달 등 각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금융, 녹색금융을 위한 심사에는 녹색분류체계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녹색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국민의힘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녹색분야 탄소리워즈 확대

나. 시사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녹색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가 실현될 경우, 해당 인센티브 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 주요 공약사항

◆ 미세먼지 관리, 해양환경 컨트롤타워 전담기관 신설, 4대강 녹조예방사업, 시멘트 등급제 등 안전한 환경 보장

◆ ESG 강화

- 기업 ESG 도입 지원,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경제구조 마련, 공공기관 ESG 경영강화 등
- 상장법인 내부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

◆ 탄소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에너지 세제 도입

나. 시사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사업장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원격 대기관리시스템 설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 공정 및 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장 환경관리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5,670개소 중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TMS가 설치된 사업장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양환경 컨트롤타워 전담기관 신설, 4대강 녹조예방사업에 따른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양환경 컨트롤타워 전담기관이 신설될 경우, 지금까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구분 관리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해상 통합 환경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이동, 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측, 정보통합과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공정관리 및 배출관리에 대한 충분한 자원의 투입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4대강 녹조 예방 및 강화에 대한 정책 기조에 비추어, 4대강 인근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강화 역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등급제 확대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가 주거공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의 단계적 퇴출 공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기물 배출자 · 시멘트 회사 · 건축회사 등 관련 기업은 앞으로 구체화될 시멘트 등급제와 관련된 정책 형성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시멘트 공정상 원료 비율 검토, 등급제 준수 방안 마련 등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공시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기후공시 강화를 위해 규제방안과 지원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규제방안으로 제시된 ‘Say On Climate’은 회사의 기후관련공시와 대응활동을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 형태로 심의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후정보 공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후공시 이행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 행정적 편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업에서는 경영진 차원에서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ESG 위상에 관한 규율 강화와 더불어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를 구축,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금융의 지원과 우대 강화를 제시하여 전반적인 ESG 공시 및 측정, 평가 인프라를 제고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응을 위한 공시는

향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ESG 공시 정보의 측정과 이에 기반한 ESG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주주환원율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4. 2. 26. 발표한 기업가치 향상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외에도 윤리경영 측면에서 임원의 임면기준 역시 강화될 예정인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유럽의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비용부담, 경쟁력 등의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형성될 제도의 도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법전략자문그룹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장대섭 고문	T. 02-316-4639 E. dsjang@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